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78
----------	------

제출일자 : 2015. 10.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내용의 전부를 관련 법령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질서 유지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장사용료 보증금 납부규정 삭제(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분야 개선사항)
- 나. 공설시장, 상설시장, 정기시장 등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 정의
(안 제2조)
- 다. 공설시장,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구체화(안 제4조)
- 라. 공설시장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용자관리대장 신설
- 마. 사용허가 취소·해지와 사용제한 규정(안 제6조)
- 바. 사용권의 양도금지 구체화(안 제8조)
- 사. 사용료 조정(안 제9조)

구 분	현 행	개 정
상설 시장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건물 : 감정평가가격의 1000분의 20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35 건물 : 감정평가가격의 1000분의 25

- 아. 사용료 감면 신설 및 반환 규정 개정(안 제10조 ~ 안 제11조)
- 자. 사용자의 관리의무 강화(안 제14조)
- 차.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신설(안 제17조)
- 카. 판매제한 신설(안 제20조)
- 타. 운영·관리의 위탁 및 취소(안 제21조 ~ 안 제22조) : 취소조항 신설
- 파. 연체료·변상금 징수 신설(안 제23조 ~ 안 제24조)
- 하. 상인회(안 제25조) : 상인회 관장업무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65조
-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제12조
-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8. 27. ~ 9. 16.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 생략(「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을 말하며,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여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5. “점포”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7. “판매대”란 시장건물 내부의 정해진 구역에서 상품 및 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8.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 판매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시장부지 안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진열,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좌판을 말한다.
9.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 장옥, 판매대, 노점,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10.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개설 및 시설기준) ① 시장은 군수가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이 있는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장의 대표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해당 건축 및 시설물의 완공일까지로 한다.

③ 임시시장의 개설신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시장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2. 제5항의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고 수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설하지 않을 경우

⑤ 시장 및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설시장 및 정기시장은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시장 및 임시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사정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사용허가를 갈음하되 군수는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1. 점포운영계획서 1부
2. 성실히행서약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정관 1부(단체에 한함)
5.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설명서, 설계도면
6. 그 밖에 관계사항을 증빙할 서류

② 군수는 시장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시장 사용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군수는 사용자의 일치여부 등 제2항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자 관리대장 상의 항목들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해지와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 사용을 해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을 허가한 시장재산을 국가나 달성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 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해당 시장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 허가를 받은 시장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사용 허가를 받은 시장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7조(청문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해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사용자는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희망자간의 권리금 수수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상속에 의하여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은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피상속인의 사용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의 계속 사용자의 경우에는 시장사용개시 10일 전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의 징수는 1년 단위로 하며, 사용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2. 점포, 장옥, 판매대, 노점이 2개 이상의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 표준액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해당 시장 내에 2개 이상의 점포, 장옥, 노점이 있을 때의 사용료의 산출은 총액의 범위 내에서 점포의 위치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내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5.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매일 징수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사용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책임질 수 없는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시장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해지된 경우
2. 천재지변, 시설현대화사업 및 공익상 필요로 인해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용해지 신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계산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장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요금) 사용허가 기간동안 시장사용에 따른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폐기물처리수수료 등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군수는 시장 사용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과 관련하여 사고의 방지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비의 설치 및 개선을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으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내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계법령이나 군수의 허가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 하거나 시장재산을 훼손하는 등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화재 예방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장 안에서 거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와 협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다만, 제2호의 경우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1개월 이상 휴업, 폐업 또는 사용허가를 해지하고자 할 때
2. 상속에 의하여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은 때
3. 시장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제16조(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고의나 과실로 시장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한 실비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 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군수는 제6조제1호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보상한다.

제18조(변경금지 및 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의 시설 및 설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취소·폐업·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재산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 보험금 수취인을 달성군(군수)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 보험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보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제20조(판매제한) 군수는 시장 안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한 것
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3. 사용허가 시 취급품목 외의 물품

제21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장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행할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수탁자의 임무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로 지정된 자는 제5조에 따라 시장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수탁자는 사용료 징수, 환경정비, 상거래 질서확립, 시장건물의 유지관리 및 시장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정 관리인을 시장 내에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관리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운영·관리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연체료의 징수)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변상금의 징수) 군수는 사용허가 없이 시장을 사용하거나 점유를 한 사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25조(상인회) ① 사용자는 사용자들로 구성된 상인회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장개축 및 관리방안의 협의
2. 청소, 방법, 노점 등 시장관리에 대한 군수의 위탁사항의 처리
3.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 불만사항의 처리

③ 제1항의 상인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시장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징수권한의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상인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하고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의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의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시장의 명칭과 위치

구 분	명 칭	위 치
상 설 시 장	회원시장	달성군 회원읍 비슬로512길 66 일원
	현풍백년도깨비시장	달성군 현풍면 현풍로6길 5 일원
정 기 시 장	논공시장	달성군 논공읍 금포시장길 4 일원
	구지시장	달성군 구지면 창리로11길 15-7 일원

【별표 2】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

1. 상설 및 정기시장의 계속 사용

구 분	대상	분류	기준	시 장 사 용 료
상설시장	점포	토지	연간 ㎡당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35
		건물	〃	감정평가가격의 1,000분의 25
	장옥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35
		건물	〃	감정평가가격의 1,000분의 25
	판매대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30
		건물	〃	감정평가가격의 1,000분의 15
	노점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35
		건물	〃	감정평가가격의 1,000분의 20
정기시장	점포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30
		건물	〃	감정평가가격의 1,000분의 20
	장옥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30
		건물	〃	감정평가가격의 1,000분의 20
	노점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30

2. 상설 및 정기시장의 수시 및 일시사용

구 분	대 상	분 류	기 준	시 장 사 용 료
상 설 시 장	장 옥	토 지	1일 3.3㎡당	1,200원
		건 물	〃	2,000원
	노 점	토 지	〃	600원
정 기 시 장	장 옥	토 지	〃	1,200원
		건 물	〃	2,000원
	노 점	토 지	〃	600원
상설 및 정기시장	이동 차량	화물차 (2t이상)	대당	2,000원
		화물차 (2t미만)	〃	1,200원
		경운기	〃	1,000원
		손수레	〃	600원

※ 상기 사용료는 3.3㎡를 기준으로 하며, 사용면적이 중간에 있을 경우 높은 기준면적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예 : 3㎡는 3.3㎡를, 4㎡는 6.6㎡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시장사용(연장) 허가 신청서				
시 장 구 분	<input type="checkbox"/> 상설시장 <input type="checkbox"/> 정기시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 용 자 (대 표 자)	법인명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성 명	①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		
시 장 명 칭			종 류	(점포, 장옥, 판매대, 기타)
상호 및 호수			허가면적	m ²
사 용 기 간 (영 업 시 간)	년 월 일 ~ 년 월 일(개월) (시부터 시까지)			
사 용 료	원		품목(업종)	
<p>「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달성군수 귀하</p>				
<p>구비서류</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1. 점포운영 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설명서, 설계도면 5. 그 밖에 관계사항을 증빙할 서류 </div> <div> 2. 성실히행서약서 1부 4. 정관 1부(단체에 한함) </div> </div>				

【별지 제2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시 장 사 용 허 가 증			
허 가 구 분	<input type="checkbox"/> 사용허가 <input type="checkbox"/> 연장허가		
성 명 (법 인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시 장 명 칭		종 류	(정포, 장옥, 판매대, 기타)
상호 및 호수		면 적	m ²
사용허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개월)		
<p>「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p> <p>년 월 일</p> <p>대 구 광 역 시 달 성 군 수 (인)</p>			

【별지 제4호서식】

허가사항 변경(휴업, 폐업, 승계 등) 및 해지 신고서

① 시 장 명 :

② 상호 및 호수 :

③ 사용자(허가자) 주소 :

④ 사용자(허가자) 성명 :

⑤ 변 경 사 유 : (허가변경내용, 휴업, 폐업, 승계, 해지, 재산망실, 기타)

⑥ 변 경 내 용

－ 당 초 :

－ 변 경 :

⑦ 변 경 사 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8조 제2항 및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달성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시장사용료 감면신청서

① 시 장 명 :

② 상호 및 호수 :

③ 사용자 성명 :

④ 감액 신청액 :

⑤ 감 액 사 유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달성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시 장 사 용 료 반 환 신 청 서

- ① 시 장 명 :
- ② 상호 및 호수 :
- ③ 사용자 성명 :
- ④ 반환 신청액 :
- ⑤ 반 환 사 유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시장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달성군수 귀하

참고 1**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65조**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전문개정 2010.6.8.]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

하는 사업

-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⑥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⑧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⑨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6.8.]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제12조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2.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군·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제목개정 2013.6.12.]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③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총회 회의록
3. 규약 또는 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④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30.>

⑤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 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중소기업청장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⑦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

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價額)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 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채납 재산을 기부받은 경우 그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4.1.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2.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10.2.4.]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7.>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를 한 자의 무단점유 경위(經緯)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2.4.]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1.>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6.21.>

⑤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6.21., 2014.7.7.>

⑥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⑦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2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물 또는 해당지역생산 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7.>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8.4.>

[전문개정 2009.4.24.]

제80조(연체료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

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4.7.7.>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7.7.>

[전문개정 2009.4.24.]